총장 선출제 갈등, 구성원 의견은?

#. 법인 이사회가 총장 선출제에 대한 구성원 의견 수렴 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한 가운데, 구성원 사이에서 빚어진 '대평의 규정안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평의 규정안은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마련된 상식적인 결과"라는 것과 아울러 "범대위는 법적 효력이 없는 미상의 단체"라는 것을 근거로 대평의 규정안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교수의회의 입장과 대척점에 있는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한상 위원장과 민주노총 경희의료원지부 손기경 지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평의 규정안 논란'에 대한 각 구성원들의 시각 차를 살펴보려 한다.

또한 양 캠퍼스 학부, 대학원 학생회가 공동으로 보내온 입장문을 통해 학생사회가 바라보는 현재갈등의 핵심을 짚어본다. 아울러 우리신문은 경희대학교 총동문회와 경희학원통합노동조합, 그리고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과 법인에 인터뷰를 요청해 총장 선출제 논의와 관련된 모든 경희의 구성원 입장을 경청할 예정이다.

"교수 비율 75%,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

강석현 기자 nuajbes99@khu.ac.kr

"다른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노력하여 만족스런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유독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이라는 한 가지 문제를 놓고서 이때까지 교수의회가 행해왔던 노력과 그 진정성이 폄하되는 현 상황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지난 1일 오비스홀 교수 연구실에서 강재식 대학평의원회(대평의) 겸 교수의회 의장이 '대평의 총장선출규정안(규정안) 논란'과 관련해 "교수의회가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추진했다는 일부 구성원들의 주장은 오해"라며 "교수의회는 구성원 간 협의를 위해 현재까지 노력해왔고 앞으로의 소통 가능성 또한 열어놓고 있다"며 직접 입을 열었다.

강 의장은 대평의 규정안에 제기된 일련의 반박들에 대해 '대평의 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대학의 중심 주체가 교수이며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대평의 규정안과 높은 교수 투표반영 비율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앞서 대평의는 지난 3월 법인이 제시한 총장후보추천규정 초안을 심의하고 지난달 22일 열린 제5차 대평의에서 투표를 통해 '대평의 규정안'을 의결했다. 교수의회는 지난달 24일 소식지를 통해 "4월 19일(제4차), 4월 22일(제5차) 열린 대평의에서 각각 토론과 수정과정을 거쳐 '대평의 규정안'이 도출됐다"며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은 교수 75%, 직원 10%, 학생 7.5%, 동문 7.5%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범대위라는 단체와 범대위에서 합의한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은 전혀 효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14:4:4:4로 합의한 문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범대위는 현재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진행, 합의, 효력, 조직 등의 어떠한 규정이나 자체 정관도 없으며, 교내의 공식적인 기구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범대위는 대평의와는 달리 참여자 간 다양한 이해관계와 주장이 상충할 경우, 책임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범대위 합의서에 기재된 당사자들 또한 협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교수의회 확인 결과, 범대위의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에 대한 합의서는 당시 범대위를 구성했던 전체 10개 단체의 대표자 중 총동문회, 총민주동문회,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서울캠퍼스 대학원 총학생회는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미완성 문건이다"라며 "따라서 해당 합의서가 구성원 만장일치로 합의된 것이라는 일부 구성원 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작년 구성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된 사항을 새로운 교수의회가 뒤집고 독선적으로 재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여 강 의장은 "지난해 범대위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 합의 당시 교수의회 내부에서도 합법적 절차를 거쳐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교수들이 해당 문제를 두고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2018학년도 제4차 법인 이사회의 총장 선출제 의결사항 중에서도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에 대해선 전혀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구성원 대의기구인 대평의에서 새롭게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평의 규정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선 대평의 평의원들의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평의 규정안에서 교수 투표반영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됐다는 비판에 대해 강 의장은 타 대학 사례와 교수 역할을 들어 높은 비율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수 사회의 역할에 비춰 봤을 때 교수 투표반영 비율은 보다 높게 주어지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의 중심 역할은 연구와 교육, 그리고 사회 공헌이며 이러한 대학의 본질과 역할에 비춰봤을 때 대학의 중심 주체는 교수라고 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교수 사회의 역할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타 대학 사례를 살펴보아도 교수 투표반영 비율 75%는 결코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다"며 "교수의회 조사 결과, 다른 어느 대학도 교수 투표반영 비율이 70%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장 선출과 관련한 구성원 투표 과정에서 교수 투표반영 비율은 전국 국립대는 평균적으로 80% 가량을 차지하며 주요 사립대 또한 모두 80%가 넘는다"며 "따라서 교수 투표반영 비율 75%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대평의 소속 일부 구성원이 대평의 규정안을 규탄하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민주적 표결 절차를 거쳐 마련된 '대평의 규정안'을 두고 교수의회가 일방적으로 대평의 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오해가 불거진 현 상황에 몹시 유감스럽다"며 "교수의회는 구성원들에 이해와 설득을 수차례나 구했으며 투표반영 비율 또한 교수의회가 당초 교수 투표반영 비율을 80%로 제시했던 안을 내려놓고 총동문회에서 제시한 75%라는 수치에 합의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강 의장은 구성원 이견 조율 과정에서 법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총장 선출과 관련한 법적 권한은 법인에 있으며, 그 책임 당사자 또한 법인이기 때문에 구성원 간 이견 조율 역할을 법인에서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의회 조사 결과, 이화여대는 법인에서 14차례나 논의를 주관하여 구성원 간 이견을 조정하고 총장 선출제를 입안했다"며 "법인이 대평의 규정안으로 다른 구성원들을 설득해 빨리 논의를 마무리하고 총장 선출의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총장 선출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과 아울러 최소 다음 학기에는 새 총장과 함께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총장 선출이 시급한 만큼, 총장 선출제의 완성도를 차츰 다듬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총장 선출이 이러한 대립 속에서 또다시 미뤄진다면, 경희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안타까운 좌절을 맞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심이 든다"고 말했다.

"규정안 논란은 합의가 아닌 존중의 문제"

〈대학평의원회 규정안〉

민주노총 경희의료원지부 손기경 지부장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에 대한 합의는 이미 치열한 논의 끝에 이뤄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민주노총 경희의료원지부(의료원노조) 손기경 지부장은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두고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초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를 출범한 직후 구성원들은 총장 선출제 논의 이전에 각자 지분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것에 합의했었다"며 "만약 각 구성원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다면 구성원들이 바라는 총장 선출제 마련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손 지부장은 "교수의회에서 주장한 것처럼 의료원노조에서도 인원을 근거로 높은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경희의료원 직원만 2,800명 가량,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직원까지 합하면 직원 수는 무려 4,000명에 이른다. 1,500명 정도인 교원의 두 배가 넘는 숫자다.

이어 그는 "의료원노조가 욕심 부리지 않은 이유는 각자의 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보를 통해 민주화로 다가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때문이다"라며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경희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모든 구성원들이 총장 선출 과정에서 '나의 한 표가 소중하게 행사됐다'고 느낄 수 있는 총장 선출제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손 지부장은 '대평의 규정안 논란' 해소의 핵심은 이미 합의된 내용이 있다는 점이라고 짚으며 "처음부터 갈등 구조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합의된 내용을 존중하며 대평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논란 해소의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다. "만약 대평의에서 무언가를 논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존 범대위와 법인이 한 논의 구조를 인정하고 지난해 구성원들이 합의한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존중하는 두 가지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교수의회가 지적한 범대위의 취약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대평의에선 일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 범대위라는 단체를 구성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구조 아래에선 대평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부 구성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더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민주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교수의회는 범대위에 대한 존중을 지체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차 총장 선출제 논의를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을 민주 정신에서 찾았다. "단지 투표를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고 민주적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익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이익 또한 존중하며 이 둘을 연대하는 과정에서 민주가 실현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 같은 맥락에서 범대위가 합의 했던 내용은 현 시점에서 가장 앞선 민주 정신을 실현한 총장 선출제"라고 말했다.

의료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법인은 구성원 한 사람의 표는 1표임을 선언하라"라는, 다소 과격한 주문을 한 바 있다. 손 지부장은 "입장문에서 1인 1표를 주장했었지만, 1인 1표를 이루는 상황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해한다"며 "이는 구성원들이 이끌어왔던 기존의 논의 구조를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경청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법인 이사회가 대평의 규정안에 대해 밝힌 '수용 불가' 입장에 대해 손 지부장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법인이 교수의회의 행보와 관련해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석한 그는 "교수의회의 비민주적, 일방적 행보에 대해 법인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일부 시각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인은 올해 구성원들에게 공식적인 논의를 제의한 바가 없다"며 "범대위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총장 선출제로 입안하는 것과 관련해 법인의 입장이 분명하게 표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인이 3월에 내놓았던 총장후보추천규정을 두고 "왜곡된 총장 선출제를 통해 법인이 원하는 총장을 독단적으로 선임하기 위함은 아닌가하는 우려도 놓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 지부장은 "지금은 경희의 사활이 걸려있다고도 볼 수 있는 중대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재정적 지표도 좋지 않으며, 이어진 공사와 후마니타스칼리지 이슈,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시도할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경희학원 전체가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갈 새 전환점이 필요하다"며 "말 그대로 역량과 명망을 갖춘 새 총장이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